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오락가락 행정에 토지 소유주 반발

토지 소유주 비대위 “보상 못할 거면 특례사업 해제” 촉구 “보상금 일정 제시 안하면 협조 않겠다” 집단 투쟁·소송 불사

광주시의 쫓대 없는 행정으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특례사업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가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업 장기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수십 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토지 보상을 못할 거면 즉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중앙공원 80%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선량한 시민들이 살아온 개인의 땅”이라면서 “1975년 2월 국가가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소유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45년간 재산권 조차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공원사업 미시행시엔 공원 해제를 결정했지만, 광주시는 형식적으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만 내놓고 보상은커녕 비공원면적을 8%로 줄였다니,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니 시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조속히 재산권 제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던가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 등 더딘 행정과 특정 건설업자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광주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토지를 보상해 주겠다는 광주시의 말만 믿고 6개월 넘게 빚을 내면서 버텨온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다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특정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5000여 지주 가족의 생계와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 광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원국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대책위원장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가 토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은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광주시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조만간 공원부지 해제를 위한 집단 투쟁과 소송 등

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240만여㎡) 토지감정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비 규모는 4000억대로 추정

되고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협상대상자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호반·중흥 등 포함...4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 난제 산적

광주 광산구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4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대형 사업인데다가 성공적 추진을 의식하는 시선도 나오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상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3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키아일레본, 케이비증권, 현대차증권이 참여했다.

적정성, 재원 조달 계획, 지역 전략산업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 일자리 가산점 50점을 포함한 1050점 만점에 기준(800점)을 충족한 842점을 부여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복합 플랫폼 도시 조성’을 콘셉트로 1만5000여 규모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21만㎡ 부지에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1조46억원)와 전략산업 시설 건설비(8052억원)만 1조8098억원으로 아파트 등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60일간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뒤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모 절차에서 나온 각종 잡음 등을 고려하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의욕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설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아파트

숲으로 조성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시는 공모 초기 장특수지 주변에 아파트 숲을 조성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친환경성, 난개발 방지 등 내용을 지침에 담아 재공고했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는 2019년 광주시의 정부 공모 사업 추진 당시 계획 작성을 돕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성’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이 상당 비중을 차지해 전략산업을 내세운 아파트 개발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계획상 부지 비중은 아파트(5000여세대) 17.2%, 전략산업시설 15.2%, 주상복합(3000여세대) 8.1%, 상업시설 3.1%로 설정됐다. 나머지는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 차질

심의위 “출연기관 너무 많다” 제동 시 “설립안 재검토해 다시 상정”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광주시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총괄할 에너지산업진흥원(가칭) 설립이 차질을 겪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진흥원 설립안이 지난달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출연기관이다. 시는 조직·인력 구성안을 마련하고 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이달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심의위는 최근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복지연구원 등 출자 출연기관이 잇따라 출범해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설립안을 재검토해 이달 내 심의위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행안부와 조직구성, 인력 운용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까지 3팀(11명), 2026년까지 1센터·4팀(16명), 2027년부터는 1센터·4팀(21명)으로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사회는 광주시장을 이사장으로 진흥원장·시민공익산업국장·시의회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이사, 자본금 출연 기관 관계자 등 최대 8명의 선임직 이사로 구성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근무성적평가 공개...민선 7기 후반기 인사안 마련

광주시는 “민선 7기 후반기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직급·직렬별 대표, 간부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방안은 미래시정과 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구조 개선, 공정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강화,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인사·조직 부서의 협

업을 통한 선제 총원 정적으로 장기적인 결원 해소와 인력 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시 383명, 자치구 412명 등 795명을 채용하고 신규자들의 조직적응과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제’를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실·국별 근무성적평가 순위도 공개할 방침이다.

직무·역량평가, 청렴성 등을 기반으로 간부 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를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개인 희망, 경력, 역량, 성비 등을 고려한 균형 인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20~30대 직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신규·전임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의제 도출에 주안점을 뒀다”며 “조직 활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한방 난임치료’ 8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를 8일까지 모집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초혼연령 상승 및 환경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남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2인 기준 월소득 617만 6000원) 중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

부부다. 올해부터 남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4개월분 맞춤형 한방치료, 침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바라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남성은 정액검사 결과 포함)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300명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8%인 5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